

# “구속영장 잇단 기각… 사법불신 우려”

### 서울중앙지검,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검찰 사명 수행 어렵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법원의 구속 영장 잇단 기각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적폐 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 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

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면서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않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전직 간부 노모씨와, 증거은닉 혐의의 현 간부 박모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모씨의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

려가 없다는 점, 박모씨의 경우 은닉한 증거의 가치가 다소 낮다는 점 등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됐다.

KAI경영비리 수사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AI 이도 본부장에 대해 “피의자의죄책에 관하여 다름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KAI 경영비리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벌써 3번째다. /뉴스

## 이용호, 11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정책토론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용호 의원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퇴근 후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 및 이에 대한 제재방법과 관련해 전문가와 정부, 경제,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다.

최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업무지시가 이뤄지고 있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노동자 2,402명 중 86.1%가 퇴근 후나 주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봤고, 27.5%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로 인한 초과 근무 시간은 주 11.3시간에 달했다.

정무 및 지자체, 일부 사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미 자리 잡은 전반적 사회·조직문화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용호 의원이 일명 ‘카톡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리는 업무 메시지 때문에 ‘베신저 감옥’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고,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번아웃(burn-out) 증후군’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프랑스, 독일 등 선진 국가 같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카톡금지법’의 실효성 확보와 부작용 방지,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김진성 기자



이용호 의원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 위한 당정협의. 지난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우원식(가운데) 원내대표와 김상조(오른쪽 세번째)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호, 제윤경 의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학영 의원, 박찬대 의원. <관련기사 6면>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 상임위 통과

### 13일 본회의 통과 시... 도내서 분쟁조정 받을 수 있고 비용절약 등 효과 기대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정읍1)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 13일 본회의 의결로 통과되면 해당부서에서 곧바로 전라북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광역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전라북도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도 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전북도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조정위원회가 주택임대차관련 대부분의 분쟁을 심의,조정, 그 내용으로는 차임 및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중개수수료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일정의 수수료(예, 분쟁조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10,000원)를 내고 조정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장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그 분쟁을 행정기관에서 해결해 줄 수 있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이 최소의 비용과 간소한 절차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금번 조례제정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국방부, 댓글사건 재조사 TF 출범

국방부는 8일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2010년~2012년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를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는 약 30여 명의 군검사, 군검찰 수사관, 헌병수사관 등이 참여한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반향 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지휘고하를 막고 엄단할 것”이라며 “TF는 수사와 관련하여 군사법원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 민주당, ‘권리당원 모임’ 기초초 설치 보류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8일 기초위원회(가칭) 설치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최고위원회의 이견으로 보류됐다.

정발위 소속 최재성 위원장, 박광온·김경수·박경미 의원, 장경태·여선용·한민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초위원회 설치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일부 시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초위원회가 설치되고 대의원 추천 권한이 부여될 경우 기존 지역위원회 위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초위원회가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발위는 이날 최고위 의결 후 오전 중으로 1차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을 보류했다. 정발위들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전체 워크숍을 갖고 최고위원회 보류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혁신안을 논의한다.

앞서 정발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인 이상의 권리당원 모임을 당의 공식 모임으로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가령 축구를 좋아하는 권리당원의 모임은 ‘축구 기초위원회’로, 영화를 좋아하는 당원은 ‘영화 기초위원회’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정당 동아리’ 형태의 당원 단체활동을 활성화하면서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발위는 아울러 기초위원회에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해 권한을 강화하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대의원 추천 권한을 어느 수준으로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뉴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2017.9.22(금) ~ 9.24(일)

전라북도 장수군 의암공원 및 장수군 일원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 프로그램

- 장수한우마당
- 사과남시제일
- 깃털놀이
- 도마토속 "황금만자를 찾아라"
- 전국 한우 인포나르기 대회
- 적과의 동침
- 애물포차 체험
- 개막 축하공연
- 페막공연 드로트 콘서트
- 레드락 퍼스티벌

주최 | 장수군 주관 |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등